

제과업 자격제도에 관한 공청회

# 제과업 자격제도 시행 찬성 뜻

지난 9월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세탁 및 제과업 자격제도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사)대한제과협회 기획분과위원회 김봉수 위원장과 대경대학 도중진 교수가 업체 대표로 토론에 참여해 업계 입장을 대변했고, 중앙회 김영모 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제과인들이 참석해 제과인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글과 사진\_정술이 기자

지난 5월 31일 정부는 제과업 등 일부 자영업자의 자격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이 발표되자마자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난으로 논란을 빚자 결국 정부는 미용실 창업규제 방침은 철회하고, 제과업과 세탁업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자격증 도입 여부를 재검토키로 결정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식품영양연구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부가 참석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표한 9명의 연사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사)대한제과협회 기획분과위원회 김봉수 위원장과 대경대학 호텔조리학부 도중진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협회와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고, 협회 중앙회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서부지회 신흥중 지회장과 이사진, 강남·강동·중부지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사)대한제과협회(이하 협회)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김봉수 위원장은 미리 준비한 자료로 그동안의 제과업계 기술력 향상 노력을 언급하고 제과업계의 시장현황과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현황을 밝혀 토론 참가자들의 이해

를 도왔다. 김봉수 위원장은 “현재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해마다 1만 명을 웃돌 만큼 자격증 취득자가 많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에게 불이익이 없고 장기적으로 업계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 자격증 도입에 관한 정부시책에 협회가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 업주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2년의 유예기간 또는 1회의 이전 기회를 주는 등 제도적 보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지난 8월 12일 공청회에 앞서 제과점 영업 자격증제도에 관한 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자격증 도입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대경대학 호텔조리학과 호텔제과제빵전공 도중진 교수는 ‘제과업 전문 자격제도’를 주제로 제과업 자격증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도중진 교수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제과·제빵 창업이 신뢰성,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밝히고 “현행 자격증 제도가 비실용적인 측면이 많다”는 설명과 함께 “자격시험의 기술력으로 이어지도록 시험 내용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격제도는 철저한 준비로 개인의 성공과 업계 발전을 동시에 이루자는 취지로 진입 장벽은 결코 아니다. 다만 혼란을 최소화할 방법을 강구하고 자격증 취득의 다양한 방법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교수는 기초 자격증을 취득하면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인 프랑스의 자격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좋은 본보기를 제시했다.

9명의 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의가 이어졌다. 서부지회 강동희(빵 빛



는 명가 대표) 이사는 “영세한 제과점들이 폐업에까지 이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격증이라는 강압적인 진입제한마저 생긴다면 기존 업주들은 문 닫으란 뜻”이라며 불만을 토로했고, 서부지회 박성훈(박성훈베이커리 대표) 부회장은 부동산업의 예를 들면서 “기존업주가 점포를 이전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영업하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기존 업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정기혜 연구팀장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정책 결정에 당사 업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 시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업계의 실정을 밝히고 업계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제과업계는 공론화된 제과인들의 공통의 목소리를 철저한 준비 자료를 통해 전달한 것은 물론 나아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서 업계의 실상을 알리는 한편 올바른 정책 입안을 마련하는 데 한 몫 톡톡히 해 업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

